

Clower, Leijonhufvud), ③ 케인즈의 『一般理論』에 보다 충실하고자 하는 根本主義의 케인지안들(Shackle, Weintraub, Minsky, Davidson, Kregel), 그리고 ④ 分配理論에 重要性을 두고 있는 케임브리지 케인지안들(Kaldor, Kahn, Robinson, Kalecki, Sraffa, Harcourt) 등으로 나누어 代表的인 學者들의 主張들을 질서 정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後케인즈派는 케인즈를 알라스의 一般均衡體系 속에서 해석하는 美國 케임브리지 中心의 新古典學派 케인지안들과, 마샬 및 리카도 등 英國의 政治經濟學的 傳統 위에 재구축함으로써 케인즈가 『一般理論』을 통해 시도하였던 期待와 不確實性 및 歷史的 時間의 概念을 도입하여 새로운 分配 paradigms를 모색하고자 하는 英國 케임브리지 케인지안들로 大別할 수도 있을 것이다.

美國의 케임브리지 케인지안들은 不完全雇傭現象이 賃金 및 價格의 下方硬直性에 의하여 나타난다고 보며, 또 分配問題에 있어서도 限界生産力概念을 강조하고 있다. 反面에 英國의 케임브리지 케인지안들과 其他 後케인즈派는 不完全雇傭의 原因과 分配問題를 資本主義 經濟의 制度的인 特性과 不完全競爭의 特徵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嚴教授가 적절히 표현한 것처럼 後케인즈派가 共通으로 強調하고 있는 投資需要의 重要性에도 不拘하고, 嚴教授는 投資需要의 決定에 관한 諸市場(商品市場 또는 資本市場, 勞動市場, 貨幣市場 등) 간의 關係에 대한 新古典學派와 後케인즈派의 差異點을 明示的으로 說明해 주지 않고 있다.

또 嚴教授는 後케인즈派의 分析에서 不確實性과 期待의 重要性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後케인즈派의 短期 및 長期期待模型을 定常的 均衡模型, 靜學的 均衡模型 및 移動均衡模型 등의 측면에서 소개하여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合理的 期待理論과 케인즈의 期待理論을 비교하면서(p. 495) 케인즈도 通貨政策 中에서 合理的 期待理論의 內容을 檢討하고 있다고 言及하고 있다. 短期的으로 貨幣量의 變化가 豫測될 경우 物價의 變動을 가져 온다고 하여, 通貨政策을 포기하면 長期的으로도 政策은 영원히 存在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貨幣의 供給增加가 인플레이션率의 增加를 가져오면 사람들의 現金保有의 機會費用을 증가시켜 現金殘高保有를 줄이게 되며, 따라서 消費가 줄고 貯蓄과 資本蓄積이 增加한다는 新古典學派의 貨幣의 成長理論은 케인즈의 立場에서 어떻게 說明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케인즈에게 있어서 인플레이션障壁(hedge)이 實質殘高效果가 없는 物物交換經濟에서 非生産的 實物投資로만 나타난다는 뜻인가? 以上과 같은 몇가지 問題點들을 아울러 다루어 주었다면 後케인즈派를 보다 幅 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케인즈의 社會思想과 今日의 不況

金 秀 行*

.....〈目 次〉.....

- I. 머리말
- II. 사회구성원에 대하여
- III. 경제체제에 대하여
- IV. 국가에 대하여
- V. 맺는말

I. 머리말

금일의 세계적 대불황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산활동이 정체를 계속하고, 대규모의 실업은 감소하지 않으며, 국제적 경쟁은 격화되고 있다. 정치면에서는, 보수적인 사회세력이 국가기구를 장악하여, 「복지사회」의 여러 제도들을 해체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냉전의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개인주의 사상이 새로운 부활을 보아, 실업 및 빈곤을 사회의 문제로 삼기 보다는 그 당사자의 개인적 문제로 간주하려고 한다.

불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금일의 사회는, 불황이 결코 경제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충분히 깨닫고 있다. 만약 불황이 (임금결정에 있어서나 생산과정의 통제에 있어서의) 노동자의 경제적 세력의 증대와, 이에 따른 이윤의 하락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본다면, 불황의 극복은 경제·정치·사상 면에서의 상당한 대립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고, 불황을 극복한 사회는 그 이전의 사회와는 다른 상황을 띠게 될 것이다.

불황과 불황극복의 대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에 대한 우리들의 지식을 넓혀야 한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케인즈의 사회사상도 이러한 점에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케인즈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양차 대전 사이의 영국경제의 불황(특히 실업)을 해명하고 그 극복대책을 제시하는 일에 그의 학문적·정치적 활동의 대부분을 바친 사람이다.

* 한신대학 무역학과 부교수. 이 글의 초고를 읽고 신랄한 논평을 해 주신 한신대학의 박영호박사와 정운영박사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다. 그러나 그의 이론과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평가가 있다.

Hicks에 의하면, 케인즈의 시대는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의 이론과 정책이 1930년대의 불황을 극복하는 데 공헌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또한 대전 후의 장기변영이 어느 정도로 케인즈식의 정책에 힘입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Hicks는 말한다.⁽¹⁾

한편, J. 로빈슨에 의하면, 케인즈는 「지금 당장(here and now)」의 문제로서의 실업의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지, 장기간의 완전고용이 야기시킬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전후 각국 정부가 케인즈식의 완전고용정책을 추진한 것은,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 계획경제체제와의 대항의식 때문이었다고 로빈슨은 말한다.⁽²⁾

케인즈 경제학이 성공적인 불황의 학문체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경제학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사회사상이며, 이것이 금일의 불황과 그 불황대책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그의 사회사상을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상, 경제체제에 대한 사상, 국가에 대한 사상 등으로 구분한다. 물론 이러한 사상은, 케인즈 자신이 가진 영국경제관(「재생시킬 투자기회는 없어지면서 옛날 풍요할 때의 저축습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동맥경화증에 걸린 경제」⁽³⁾)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사회사상이 금일의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그의 사상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첫째 부분에서는, 케인즈가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을 분류하고 특징지어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사상이 금일의 불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마르크스의 사상을 대비시켜 볼 것이다. 금년이 마르크스 사후 100주년이라는 점 이외에도, 그의 사상은 케인즈의 사상과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금일의 불황을 이해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부분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체제에 대한 케인즈의 사상을 다룬다. 그가 인식한 자본

(1) J. Hicks, *The Crisis in Keynesian Economics*, Basil Blackwell, 1974, pp.1-3. 다음의 글에도 비슷한 주장이 있다. B. Sutcliffe, "Keynesianism and the Stabilization of Capitalist Economies," in F. Green and P. Nore, eds., *Economics: An Anti-text*, Macmillan, 1977; R. Matthews, "Why Has Britain Full Employment since the War?," *Economic Journal*, September 1968.

(2) J. Robinson, "The Second Crisis of Economic Theory," in *Contributions to Modern Economics*, Basil Blackwell, 1978, p.6. 이 책에 있는 다음의 논문도 참조하라. "What Has Become of Employment Policy?"

(3) J. Schumpeter,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p.1171.

주의 사회의 장점과 단점을 지적하면서, 그 단점이 사회 자체 내의 힘에 의하여 해결되리라 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음을 상기시킬 것이다. 이 점에서 케인즈는 자본주의 사회의 역사적 이행(historical transition)에 관한 사상을 결여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부분은 케인즈의 국가관을 다룬다. 사회구성원의 치부욕과 개인주의를 일정한 규율 하에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의 개입을 주장할 때, 케인즈는 과연 국가를 어떠한 존재로 파악하고 있었는가를 밝힐 것이다. 만약 국가를 실업해소의 사회적 기구로 파악하였다면, 금일의 국가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사상의 영향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금일의 각국 정부는 「실업을 창조하는」 여러가지 정책을 꾸준히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교육·위생·사회 서비스 부문의 삭감, 재정·금융의 긴축정책, 국내기업의 다국적화 추진 등이 그것이다.

II. 사회구성원에 대하여

케인즈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을 소비자, 투기가 및 기업가로 구분한다.⁽⁴⁾ 그들은 모두 치부욕과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며,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무지를 자기 나름대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⁵⁾

소비자는 소득이 오름에 따라 저축성향을 높이며, 투기는 단기적인 투기이익을 노려 유가증권보유 혹은 화폐보유를 결정하며, 기업가는 이자율과 장래의 예상투자수익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다고 케인즈는 본다.

한계소비성향, 유동성선호 및 자본의 한계효율은 사회구성원들이 불확실한 장래에 대처하는 행동양식을 파악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개념들은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사실상 케인즈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 약점」⁽⁶⁾인 실업과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불확실성의 존재와 그것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태도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그는 말한다.

「이 시대의 주요한 경제적 폐해의 다수는 위험성, 불확실성 및 무지의 소산이다. 상황이나 능력에

(4) 이러한 구분은 그의 유효수요(=소비수요+투자수요)이론에 함치된다.

(5)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間宮陽介, 「モラル・サイエンスとしての經濟學：ケインズ神話の解釋」; 松原隆一郎, 「ケインズとハイエク：慣習論の系譜」. 두 글 모두 『季刊現代經濟』, 1983, No. 52 (臨時増刊號), 에 있음.

(6) J. M.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GT로 약칭할 것임)(1936),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Vol. VII, Royal Economic Society, 1973, p.372.

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특정의 개인이 불확실성과 무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의 심한 불평등 분배가 나타난다. 이것은 또한 대기업들이 때때로 투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한다. 더우기 불확실성과 무지에 대한 개인들의 이기적 반응 때문에, 유망한 기업들이 실패하여 실업을 발생시키고 능률과 생산을 저해하고 있다.」⁽⁷⁾

다시 말하자면, 케인즈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을 「노름꾼들」⁽⁸⁾로 간주하고, 노름꾼들의 요행에 따라 재산의 불평등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노름꾼들이 판돈을 거두어 들일 때, 실업과 유휴설비가 발생한다고 본다.

더우기, 케인즈에 의하면, 불황의 발생과 회복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기업가의 장래예상인데, 이것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기업가의 심리」에 의존한다. 이에 따라, 이자율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저수준까지 인하시키더라도, 자본의 한계효율이 너무나 폭락하여, 투자를 촉진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케인즈는 말한다.⁽⁹⁾

결국, 쉽게 풀이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불황은 기업가의 장래예상이 낙관에서 비관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비관론이 낙관론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불황은 계속된다고 케인즈는 생각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케인즈의 사상은, 사회구성원들의 개인주의에 맡겨 두면 실업을 해소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리고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의 가정」⁽¹⁰⁾에 의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의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다는 생각은 여러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를 지적할 뿐이다. 투기자의 유동성선호로 이자율의 「소망스러운」 하락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자본의 한계효율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 역할」에 비하면, 전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유동성선호의 급증은, 케인즈도 인정하듯이,⁽¹¹⁾ 자본의 한계효율의 폭락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유동성선호와 불황의 발생을 인과관계로 연결시키기가 어렵다. 결국 기업가의 장래예상만 남게 되는데,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심리의 작용이기 때문에, 케인즈 마음대로 지금의 상태를 가정할 수 있다.

어느 경제학자는 케인즈의 불황이론과 태양혹점설을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물론 그 인과관계가 주관적이나 객관적이나에서 차이가 나지만, 방법론적으로는 꼭 같다. 곧, 경

(7) J. M. Keynes, "The End of Laissez-faire" (1926), in *Essays in Persuasion* (EP로 약칭할 것임) (1931),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Vol. IX, Royal Economic Society, 1972, p. 291.

(8) G. Shackle, *Keynesian Kaleidics*,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74, p. 67.

(9) Keynes, *GT*, pp. 316-7.

(10) Schumpeter, *op. cit.* p. 1177.

(11) Keynes, *GT*, p. 316.

기순환을 자본주의 경제의 내부적 작용으로부터가 아니라,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설명하기 때문이다. 케인즈의 경우는 개별자본가의 기분에서 찾고, 태양혹점설은 태양혹점의 크기에서 찾는다. 그러나 자본가의 기분이 태양혹점의 크기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여도 케인즈의 이론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¹²⁾

결론적으로 말하면, 케인즈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을 소비자, 투기가 및 기업가로 구분하고, 그들의 자율적 심리와 행동의 변화에서 경제의 변동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에 의하면, 사회구성원들의 심리와 행동의 자율성이 사회 그 자체 혹은 사회적 과정에 의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 변화는 경제변동의 설명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장래의 전망이 비관적이면 기업가는 투자를 중단한다고 케인즈는 생각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윤추구와 경쟁⁽¹³⁾ 때문에 기업가는 「끊임 없이」 투자에 몰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이윤추구와 경쟁은 모든 기업가들에게 기술혁신과 대량생산을 강제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경제변동론에 있어서는, 투자하려는 「의욕」 보다는 투자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능력의 「한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다.⁽¹⁴⁾

물론 이러한 차이는 추상도(level of abstraction)의 차이에서 유래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추상도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의 기업가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추상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의 기업가의 행동만 관찰한다면, 기업가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¹⁵⁾

투기자의 유동성선호(혹은 화폐의 퇴장)가 야기하는 악영향을 케인즈와 마르크스는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전자는 투기자의 투기적 동기의 결과로 파악하는 데 반하여, 후자는 화폐의 일반적 등가물(general equivalent)로서의 기능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물론 케인즈가 화폐의 일반적 등가물로서의 기능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투기적 「동기」를 유동성선호에 결부시킴으로써 유동성선호의 객관적 의미를 충분히 개발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¹⁶⁾

마르크스에 의하면, 상품의 판매가 순조롭지 못하여 상업신용의 수단(및 주식)이 위협에

(12) Sutcliffe, *op. cit.*

(13) 케인즈의 처부욕과 개인주의에 대응하는 꼭 같은 개념이다.

(14) 김수행, 「현대 학문의 새 경향: 경제학 분야」, 『현상과 인식』, 1983년 여름호.

(15) 이것은, 마치 「자본은 평균이윤을 낚는 신비스러운 내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환상이, 추상수준이 낮은 생산·유통·분배의 총과정만을 연구할 때 생기는 것과 꼭 같은 이치이다. 김수행, "Fetishism of Capital at the Unified Process of Production, Circulation and Distribution," 『한신논총』, 한신대학, 1983.

(16) S. de Brunhoff, *Marx on Money*, Urizen Books, 1976, p. 41.

빠지면, 기업가(및 투기가)는 누구나 화폐를 보유하려고 하며, 이에 따라 이자율의 상승과 신용제도의 파괴가 오고, 나아가서 상품의 투매 및 가격폭락 등으로 경제전체가 침체에 빠진다고 본다. 투기가의 심리를 개입시키지 않고서도, 유동성선호가 일으키는 악영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다.

금리생활자⁽¹⁷⁾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케인즈와 마르크스는 그 입장을 달리한다. 케인즈는, 유동성선호가 야기하는 악영향과 이자수입에 의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금리생활자의 안락사」⁽¹⁸⁾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금리생활자의 규모가 커질 것을 예상한다. 기업의 대규모화에 따라, 산업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본의 최소단위가 상승하면, 이 최소단위에 미달하는 자본은 신용제도(은행 및 주식시장)를 통해 기업에 흡수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마르크스는 신용제도의 발달에 따라 자본의 집중이 촉진되고, 생산규모의 증대와 이윤창출의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물론 산업이윤이 이자와 기업가이윤(profit of enterprise)으로 분할되는 과정에 개재되는, 대부자본가와 산업자본가 간의 이해대립을 마르크스는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 경기순환 중의 이자율과 이윤율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그는 공황이 발발하는 시점에서는 최고의 이자율과 최저의 이윤율이 공존하며, 경기회복기에서 호황기까지만 낮은 이자율과 높은 이윤율이 공존한다고 말한다.⁽¹⁹⁾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케인즈는 사회구성원 특히 기업가의 심리변화에서 경제변동의 원인을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황으로부터의 회복도 장래에 대한 기업가의 낙관론의 소생에서 구하고 있다. 한편, 마르크스는 기업가를 끝없는 이윤추구와 치열한 경쟁의 와중에 있는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기업가의 심리변화에는 전혀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불황 속에서도 기업은 새로운 이윤추구의 방법을 계속 모색한다고 본다.

이 두가지의 접근방법 중 어느 것이 금일의 기업의 불황대책을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을까?

낮은 이윤율과 도산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감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불황기에 (곧, 대규모의 실업이 존재하고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수준에 있는 시기에) 여러 산업에서는 노동절약적인 신기술의 도입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 유휴설비와 실업자가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은행과 기업은 해외에 투자하여 국내의 고용과 산업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17) 금리생활자는 화폐자본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주식의 소유자까지도 포함한다.

(18) Keynes, *GT*, p. 376.

(19) K. Marx, *Capital*, Vol. III, Penguin Books, 1981, Ch. 30.

기업은 조세에 대한 저항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케인즈의 기업가론은 매우 불충분하다. 기업가의 심리에 관한 연구보다는 이윤추구의 방법과 거기에 내재하는 갈등에 관한 연구가 더욱 적합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²⁰⁾

III. 경제체제에 대하여

케인즈는 치부욕과 개인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이들에 일정한 제한과 규율을 가한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어느 사회체제보다 더욱 자유롭고 능률적인 사회」가 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케인즈는 프리드만 및 하이예크와 비교할 때 「대립면보다는 공통점이 더욱 크다」⁽²¹⁾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케인즈는 사회주의 혁명 후의 러시아를 방문한 뒤에 쓴 글⁽²²⁾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도덕적」 문제를 강조한다. 곧, 사회생활의 거의 대부분이 치부동기의 자극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치부 자체가 성공의 지표가 되어 있고, 개인의 경제적 안정이 모든 활동의 주요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러시아 사회를 다음과 같이 찬양한다.

「레닌주의의 감정적 윤리적 핵심은 치부욕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인간의 성격을 변경시키고 있다든가, 변경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 러시아의 공산주의는 새로운 이상을 수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구조를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 사회구조 안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자극하는 치부동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성을 띠게 될 것이며, 성공의 사회적 기준이 달라질 것이고, 종전에는 정상적이고 존경받던 행동이 더 이상 그렇게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 러시아는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서구사회의 큰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²³⁾

그러나, 러시아의 공산주의나 독일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는 「능률과 자유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케인즈는 비판한다.⁽²⁴⁾

(20) 불황시에 노동절약적인 신기술이 도입되는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실업의 증대로 노동조합의 세력이 약화된 불황시에는, 노동절약적인 신기술의 도입이 용이하다. 시장규모가 격감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불황시에는, 단위당 상품의 가격인하가 급선무이다.

(21) 早坂忠, 「ケインズの社會思想と國家觀」, 『季刊現代經濟』, 前掲號.

(22) Keynes, "A Short View of Russia" (1925), *EP*.

(23) *Ibid.*, pp. 259-60, 270.

(24) 케인즈는 자기의 이론이 국가사회주의 하에서 더욱 잘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렇기 때

다시 말하자면, 치부욕과 개인주의는 실업과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야기시킨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케인즈는 생각한다⁽²⁵⁾. 곧, 치부의 동기와 사유재산의 제도는 인간의 유용한 활동들을 최고도로 성취시키는 데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또한 그것은 인간의 위험한 성향들이 개인적 권위의 추구나 잔인한 행동의 방향으로 발산되는 것을 막고, 비교적 무해한 것(예를 들면 은행계정의 관리)에 집중하도록 한다. 한편 개인주의는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결정 및 책임의 분산에서 연유한다. 또한 개인주의는 개인적 선택의 폭을 넓혀 인생의 다양성을 보호함으로써, 미래를 개선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곧, 인생의 다양성)을 제공한다.

결국, 케인즈는 자본주의 체제의 장점을 살려 그 체제를 유지 보존시키기 위하여, 치부욕과 개인주의에 일정한 규율과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특히 그는 주식회사제도의 발달로 개인적 이윤동기가 사실상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본다.

「자본의 소유자(곧, 주주)는 경영으로부터 거의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이윤추구에 있어서의 경영자들의 직접적 개인적 관심은 전혀 이차적인 중요성을 띠게 된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경영자들은 주주를 위한 최대한의 이윤보다는 그 회사의 일반적 안정과 평판을 더욱 고려하게 된다.」⁽²⁶⁾

이처럼 「대기업의 사회화」 현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내부에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기구가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케인즈는 국가 기구에 의한 「투자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investment)」⁽²⁷⁾를 주창한다. 곧, 완전고용과 소득분배의 평등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기구는 조세정책과 금융정책으로 국민의 소비 성향과 투자유인을 유도하거나 직접적인 투자활동으로 「최적의 투자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케인즈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가 「어느 사회보다도 훌륭한 사회」로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체제관은 어떠한가?

케인즈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인(곧, 변명적인) 사상에 몰두한 데 반하여,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가 그 자체 내의 힘에 의하여 변동하여 가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한다.

후자에 의하면, 자본주의 체제의 동력(motive power)은 자본가들의 끊임 없는 이윤추구와

문에 자기의 이론을 『일반』이론이라고 부른다.」는 구절이 1936년의 독일어판 『일반이론』의 서문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지금의 GT에는 보이지 않는다. B. Schefold, "The General Theory for a Totalitarian State?: A Note on Keynes's Preface to the German Edition of 1936,"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April 1980.

(25) Keynes, *GT*, pp. 374, 380.

(26) Keynes, "The End of Laissez-faire," *EP*, p. 289.

(27) Keynes, *GT*, p. 378.

그것에 관련된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투쟁이다. 계급투쟁의 의의는 반드시 자본주의 체제의 파괴와 관련있는 것만은 아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를 부정하는 정도로까지 심화되지 않도록, 자본가들이 양보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발전하고 있다고 마르크스는 본다.

노동시간의 연장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이 기계의 도입을 촉진하였고, 임금의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높은 생산성의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노동자들의 참정권 획득이 사회 전체의 민주화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마르크스는 분석한다.⁽²⁸⁾⁽²⁹⁾

케인즈는 주식회사의 발달을 공공의 이익 증진과 관련시키고 있지만, 마르크스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주식회사는 은행이 제공할 수 없는 「무기한의 자금」을 사회 전반에 걸쳐 동원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자본은 개별자본가의 소유가 아닌 사회적 자본이며, 이 점에서 개별자본가의 사회적 기능이 사실상 약화내지는 불필요하게(redundant)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윤추구에 필요한 대규모의 고정자본설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작된 주식회사는, 아무리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이윤추구를 그 목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따라 마르크스는 경영자를 자본의 「대리인(agent)」에 불과하다고 본다.⁽³⁰⁾

주식회사의 발달에 의한 「자본의 사회화」는 노동과 자본의 대립관계를 약화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과정의 협동적 성격의 강화(곧, 「노동의 사회화」)는 노동의 중속성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마르크스는 관찰한다.

결론으로, 케인즈는 국가의 개입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았지만, 마르크스는 노동자에 의한 국가권력의 장악으로 새로운 사회(거대한 생산능력을 활용하여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도록 하는 사회)가 출현할 것을 전망한다.⁽³¹⁾

(28) K. Marx, *Capital*, Vol. I, Penguin Books, 1976, Pts. III and IV.

(29) 물론,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양보는 일정한 한도를 가지지 않을 수 없고, 그 한도를 넘는 요구는 이윤추구의 능력을 제한하여 불황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마르크스는 본다.

(30) M. de Vroey, "A Marxist View of Ownership and Control," in T. Nichols, ed., *Capital and Labour*, Fontana Paperbacks, 1980.

(31) 경제적 공황이 사회체제의 변화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의를 케인즈는 별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IV. 국가에 대하여

케인즈는 실업(및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의 밑바탕에는 국가의 능력과 국가정책의 추진세력에 관한 그의 사상이 깔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적 위기에 대한 그의 인식이 깔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케인즈에 의하면,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의 심리와 행동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는 「개인 간의 소득이전에 불과한 투기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32) 자본의 한계효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장기적 안목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33)

따라서 국가는 투자를 완전고용의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보면서, 개인주의의 기초원리에 대하여 여러가지의 비판을 가한다.

「개개인이 그들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법적인 『자연적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소유주나 취득자에게 영구적 권리를 부여하는 『협약』은 없다.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항상 일치하도록, 이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은 일치되고 있지 않다. 계명된(enlightened) 이기심이 항상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용한다는 것은 경제학원리로부터의 올바른 추론이 아니다. 이기심이 일반적으로 계명되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표를 각자가 추구하는 경우 그 개인들은 너무나 무식하거나 연약하여 자기 자신의 목표까지도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34)

결국, 케인즈에 의하면, 개인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국가는 사회적 이익 혹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 (35)

그런데 국가의 여러가지 기구들(의회, 정부의 각 부처, 중앙은행 등)은, 「기존이익(vested interests)」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기 보다는, 그 기구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ideas)」에 의하여 더욱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케인즈는 생각한다. (36)

따라서 국가의 경제정책이 실업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넓은

(32) Keynes, *GT*, p.158.

(33) *Ibid.*, p.164.

(34) Keynes, "The End of Laissez-faire," *EP*, pp.287-8.

(35) 사회적 이익 혹은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분명하지 않지만, 케인즈는 개인적 이익의 합계가 사회적 이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塩野谷祐一, 「ケインズの道德哲學」, 『季刊現代經濟』, 前掲號. 나의 견해로는 실업과 소득분배의 불평등의 해소를 사회적 이익이라고 보았다고 말하고 싶다.

(36) Keynes, *GT*, pp.383-4.

지식」에 사로잡힌 정치가와 관료들 때문이지, 결코 어떤 이익집단이 실업을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이에 따라 케인즈는, 「지식인들이 무식한 투표자들에게 의해 선출된 의회나 정부의 위에 서서」 국가의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7) 또한 이를 위하여 「반자율적인 기구들(semi-autonomous bodies)」을 설치하여 국가의 임무를 위임하기를 권고한다. (38)

국가 기구들은 특정한 이익집단의 당파적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평무사한 「지식귀족」이 국가기구를 장악해야 한다는 사상은 케인즈의 고정관념(second nature)에 지나지 않는다. (39) 어떻게 하여 지식인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다.

물론 케인즈는 그 당시의 정부가 경제문제의 해결에 속수무책인 것에 많은 실망을 하였으며 국가가 사회적 이익(곧, 실업과 소득분배의 불평등의 해소)의 증진에 사실상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에 따라 그는 지식인의 정치 개입을 주창한 것으로 보인다.

왜 실업과 소득분배의 불평등의 해소가 사회적 이익이 된다고 케인즈는 생각하였는가? 이것만이 자본주의 체제를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양자 대전 사이의 영국사회는 「마르크스주의적 공산주의에 대한 현실적 대체물」을 만들어내야 할 단계에 있다고 케인즈는 보았다. (40) 영국경제의 침체 및 대량실업과는 대조적인 사회주의 러시아의 급속한 성장, 케임브리지 지식인들의 좌경화, (41) 노동운동의 격화(42) 등을 목격한 케인즈는, 실업의 해소와 소득분배의 균등화를 통하여 「사회정의」와 「사회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체제를 유지하려고 한 것이다.

「소비성향과 투자유인을 조절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는 것은, 19세기의 시사평론가나 금융의 미국금융인의 눈에는 개인주의에 대한 엄청난 침해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지금의 경제형태의 전면적 파멸을 회피하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이며, 또한 이것이 개인의 독창력을 성공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기능의 확대를 주창한다.」(43)

(37) Keynes, "Am I a Liberal?" (1925), *EP*, p.295.

(38) *Ibid.*, pp.301-2; "The End of Laissez-faire," *EP*, pp.288-291.

(39) R. Harrod, *The Life of John Maynard Keynes*, Penguin Books, 1972, p.226.

(40) Keynes, "Am I a Liberal?" *EP*, p.304.

(41) 「우리들은 우리들의 후배들을 보호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이론(곧, 마르크스 경제이론의 대체물)을 제공하는 데 완전히 실패하였다.」고 케인즈는 자탄한다. Keynes, "My Early Beliefs" (1938), in *Essays in Biography,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Vol. X, p.446.

(42) 1926년에 최초의 총파업이 있었다. S. Pollard, *The Development of the British Economy 1914-67*, 2nd ed., Edward Arnold, 1969, Ch. 5.

(43) Keynes, *GT*, p.380.

『일반이론』의 마지막 제24장("Concluding Notes on the Social Philosophy towards Which the General Theory Might Lead")은 사실상 케인즈가 『일반이론』을 쓰게 된 동기를 소개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enquiry)의 순서와 서술(presentation)의 순서가 다르지 않을 수 없어, 마지막의 장으로 밀려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이론』의 동기는, 실업과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해야 할 급박한 시기에, 「자본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훌륭한 조치들을 불세비즘으로 간주하고 있는」⁽⁴⁴⁾ 지도자들을 제몽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곧, 정부의 조세정책으로 소득분배를 평등화시키면 소비성향이 제고되어 투자 및 소득이 증가한다든가, 정부의 금융정책에 의해 이자율을 인하시키면 이자수입의 감소와 투자의 증대가 나타난다든가, 불황은 수요부족에서 기인하는데 당장에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정부의 적자지출 뿐이라는 것 등이 그 것이다.

요약하면, 케인즈는 국가를 「사회적 이익」의 옹호자로 보며, 실업의 해소와 소득분배의 평등화를 사회적 이익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케인즈의 국가관과 경제정책은 사회민주주의의 발달을 크게 도왔다.⁽⁴⁵⁾ 왜냐하면 그의 사상은 평등주의의 팽창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⁴⁶⁾ 진보적인 관료와 기업가 및 노동조합을 연합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일의 불황에 대처하고 있는 국가의 경제정책을 케인즈의 관점에서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금일의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고 소득세의 누진율을 인하함으로써,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강화하고 실업을 창출하고 있다.

금일의 국가는 고금리정책을 채택하여 기업다수를 도산시키고 있다.

금일의 국가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규제하고, 임금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일의 국가는 실업의 해결보다는 인플레이션의 진정화를 정책의 최대 목표로 삼고,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을 임금의 상승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금일의 국가는 자본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며 이에 따라 국내의 산업과 고용은 타격을

(44) Keynes, "Am I a Liberal?," *EP*, p. 299.

(45) P. Lambert, "The Social Philosophy of John Maynard Keynes" (1963), in J. Wood, ed., *John Maynard Keynes: Critical Assessments*, Croom Helm, 1983; J. Grahl, "The Liberal Revolutionary," *Marxism Today*, June 1983.

(46) 케인즈 이전의 평등주의자는, 소득분배의 평등화가 모든 점에서 옳은 일이지만, 저축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하나의 점 때문에 그것을 강력히 주장할 수 없었다. 그러나 케인즈는 저축증대가 실업을 가져온다고 하였기 때문에, 평등주의는 크게 팽창할 수 있었다. Schumpeter, *op. cit.*, p. 1171.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의 경제개입을, 「낮은 지식」에 사로잡힌 정치가의 무지의 소치로 본다든가, 특정한 이익집단의 당파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든가,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그 최대의 과제이다.⁽⁴⁷⁾ 이 점에서는 케인즈도 「사실상」 공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케인즈가 불황의 해소만이 체제의 유지에 공헌한다고 본 것과는 달리, 마르크스의 입장에서는 불황을 악화 또는 지속시키는 것이 체제의 유지와 발전에 공헌하는 경우가 있음을 본다.⁽⁴⁸⁾

예를 들면, 국제적 경쟁이 치열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능률이 낮은 기업을 정리 도산시키고, 능률적인 기업으로 자본을 집중시키는 것이 경제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국가의 고금리정책이나 재정의 긴축정책은 이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한가지의 예는 노동조합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의도적으로 실업을 창출하는 경우이다.⁽⁴⁹⁾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는 물론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그 일차적 목적이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은 공공부문에서의 실업증대는 노동조합 전체의 투쟁력을 약화시켜 신기술의 도입과 임금인상율의 저하를 용이하게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는, 케인즈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로지 실업의 해소와 소득분배의 평등화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며, 정치적 안정을 위하여 불황의 진정화에만 노력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는 자본의 축적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 애로 요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며, 이에 따라 불황을 당분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경제적 불황이 체제적 위기에까지 도달하지 않도록, 「새로운」 사상(예를 들면, 프리드만의 경제사상)의 전파에 노력하게 된다.⁽⁵⁰⁾

V. 맺 는 말

이상에서 케인즈의 사회사상을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상, 경제체제에 대한 사상 및 국가에 대한 사상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의 사회사상은 양차 대전 사이의 영국 사회를 기

(47) B. Jessop, *The Capitalist State: Marxist Theories and Methods*, Martin Robertson, 1982, Ch. I.

(48) B. Fine and L. Harris, *On the Problem of Analysing Current Economic History*, mimeo.

(49) A. Glyn and J. Harrison, *The British Economic Disaster*, Pluto Press, 1980.

(50) G. Therborn, *The Ideology of Power and the Power of Ideology*, New Left Books, 1980.

반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과 경제체제에 대하여 오히려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치부욕과 개인주의가 실업과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강조되었고, 그들이 자본주의 사회를 진화시켜 온 동력이라는 측면은 간과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경제의 외부로부터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소비자, 투기가 및 기업가와는 전혀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국가(지식인의 통치기구)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개입해야 한다고 케인즈는 본 것이다.

이러한 그의 사회사상은 금일의 불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불황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본과 노동의 대립(노동절약적 신기술의 도입, 노동규율의 강화, 임금상승의 억제 등), 자본의 재구성(restructuring of capital)을 위한 국가의 개입(고금리정책에 의한 비능률적 기업의 정리, 기업집중의 허용 등), 사회복지제도의 축소 등은 기업가 및 국가에 대한 케인즈식 사고방식으로서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왜냐하면, 케인즈에 의하면, 기업가는 장래에 대한 비관 때문에 불황기에는 투자를 중단하며, 국가는 항상 실업의 해소와 소득분배의 평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케인즈와는 달리, 마르크스는 기업가를 「인격화된 자본(personified capital)」으로 보고, 기업가는 호황과 불황을 가리지 않고 「능력」이 있는 데까지 이윤추구를 위하여 투자를 계속한다고 본다. 또한 그는 국가의 경제개입은 자본축적의 촉진을 위한 것이며, 그 구체적 형태는 당시의 경제상황과 경제투쟁에 참여한 세력 간의 힘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따라서 마르크스에 의하면, 이윤추구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자본과 노동 간의 대립, 자본 간의 경쟁 등이 불황을 통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재구성되며, 이러한 대립의 집결지인 국가는 대립세력 간의 힘관계를 고려하면서 불황이 자본축적의 새로운 강장제가 되도록 유도한다.

금일의 불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케인즈의 사회사상 보다는 마르크스의 그것이 더욱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⁵¹⁾

(51) 김수행, *Theories of Economic Crises: A Critical Appraisal of Some Japanese and European Reformulations*, Ph.D. Thesis, University of London, 1982.

〈論 評〉

金弘明教授*의 論評

資本制의 社會의 구성원은 오늘날 케인즈經濟學이 社會·經濟政策의 국면에 적용되는 데 따라 이의 혜택 혹은 희생물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케인즈의 經濟理論의 基礎를 이루는 構想은 무엇인가? 金秀行교수의 「케인즈의 社會思想과 金일의 不況」은 이러한 脈絡에서 우리의 관심을 얻어내기 충분한 重要性을 지닌 主題라 생각된다. 그리고 金교수는 거기서 상당한 정도로 마르크스의 構想과 比較하면서, 이를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考察해 놓았다. 본 論評者는 論文의 성격에 비추어 마르크스의 構想에 관한 논의를 생략하려고 하며, 또한 논의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金교수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설명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한다.

金秀行교수의 論文의 주요한 내용은 「I. 머리말」과 「II. 社會구성원에 대하여」에서 대체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케인즈가 「자본주의 社會의 구성원을 소비자, 투기가 및 기업가」로 분류했으며, 그러한 社會 내의 構造的 矛盾이라 할 失業과 分配的 不平等을 人間생활에 보편적인 利潤期待의 不確實性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곧 이에 관한 「기업가」의 비관적 기대는 投資를 중단시키게 되며, 따라서 「비관론이 낙관론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不況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金교수의 「III. 경제체제에 대하여」와 「IV. 국가에 대하여」는 케인즈의 構想의 성격을 資本制의 틀 안에서 政策的 方案을 모색한 것으로, 그리고 케인즈는 社會적 이익의 代價자로서 國家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주창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케인즈가 자기의 이론이 「국가사회주의 하에서 더욱 잘 적용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金교수의 論文은 결코 이상의 要約만으로 올바른 소개를 받은 것은 아니다. 실로 그는 매우 설득력 있게 보다 광범위한 케인즈思想의 비판에 성공하고 있는 나머지 혹자는 케인즈가 과연 社會思想을 가졌는가 의문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의 批判的 評價가 토론과정에서 제기되는 것을 金교수는 이해해 주기 바란다.

첫째, 經濟思想家로서 케인즈의 史的 立場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케인즈는, 古典政治經濟學에서처럼 生産過程에 나타나는 諸階級의 相對的 所得을 결정하는 法則보다는, 物量 자체의 生産水準에 관한 關係에 관심을 돌림으로써 前者 및 新古典派經濟學이 正常的인

* 西江大學校 政治外交學科 助教授

雇傭을 가정하거나 過剩生産을 定義에서 배제하고 있는 認識의 空白을 발견했다. 그에게는 社會의 失業과 不況이 人爲的으로 해소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의 이론은 스승인 마샬의 限界理論 위에 서고 있었으나 수입·소비·투자 등 集合概念을 통해 전개되고 있는 까닭에 古典的 政治經濟學에로 復歸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케인즈의 經濟理論은 心理的 法則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金교수는 물론 「노름꾼들」의 「장래예상」이라는 心理를 지적했다. 그러나 그것은 個人的 選擇의 문제로서 혹은 단순히 集合들의 可變性의 문제로서 파악된 「心理」라기 보다는, 消費性向, 流動性選好, 그리고 資本의 限界效率性이라는 集合概念을 지배하는 心理的 「法則」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는 集合의 水準에서 經濟問題를 논의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金교수는 투기자와 기업가를 나누고 있다는 점이다. 일상용어로서의 투기자는 기업가와 동일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지만, 케인즈는 投資를 商品의 生産·流通過程에 직접 관계되는 「실질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예컨대 株式이나 債券을 사들이는 행위를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렇다면 金교수의 分類는 재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一般理論』은 自由民主制가 위기에 처한 經濟的 基盤 위에서 있었던 시기에 쓰여졌으며, 그의 이론적 문제는 有效需要의 社會的 創出을 통해 生産과 消費의 不均衡을 극복하는 데 있었다. 消費를 惡德으로 알았던 「프로테스탄트의 倫理」의 殘影이 이미 그 歷史的 機能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經濟學者와 一般을 비치고 있었다. 그의 理論的 地平은 이를 清算하는 데 미쳤으나 그것의 實體인 生産關係로서의 資本制가 자신의 歷史的 機能을 完了했는가에는 想到하지 않았다. 資本制는 國家 및 發達國의 周邊國의 介入을 통해 아직 강렬한 빛을 남기고 있었던 것이다.

孫明煥教授*의 論評

金秀行교수의 이번 발표논문은 오늘날의 불황 및 불황대책을 이해하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주로 마르크스의 사상과 이론의 관점에서 케인즈경제학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사회사상에 대하여 비판적 평가를 시도한 것이다. 이 논문은 오늘날의 불황문제를 이해하는 데에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분석시각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흥미롭다.

* 忠南大學校 經濟學科 副教授

이 논문에 대한 본인의 논평은 다음의 세가지 점에서이다.

첫째, 마르크스의 분석이 자본주의경제에서 초래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의 제기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필연적인 해결의 방향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는 보다 많은 논의와 검토를 요하는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것은 마르크스의 이론 및 사상체계에 있어서 목적론적 역사관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를 결여한 것임을 지적할 수 있겠다.

둘째, 이 논문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케인즈는 마르크스처럼 자본주의사회의 역사적 이행의 문제보다는 자본주의체제의 유지를 위한 단기적인 불황의 극복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양자의 이론 및 사상체제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 사실 케인즈이론의 「장엄한 모습」은 1940년대 이후 거시경제학의 전개양상과 관련되어 나타난 산물로서 그릇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케인즈의 이론과 사상은 반드시 자본주의경제의 일반이론으로서 거창하게 취급되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케인즈의 특정한 이론적 기여들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평가하려는 시도 또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며 만약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졌다면 케인즈의 이론 및 사상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이러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첫번째에서 지적했듯이 마르크스의 이론과 사상의 일반적 타당성이 아무런 의문 없이 전제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사회구성원, 경제체제, 국가 등은 시대적 상황과 여건의 변동에 따라 그 성격이 상당한 정도로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이며 불황의 성격 또한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인바, 100여년 전의 인물인 마르크스의 이론과 사상이 오늘의 불황 및 불황대책과 관련지워 볼 때 몇 가지 단편적인 문제에 있어서 타당한 면이 있다고 하여 오늘의 불황을 이해하는데에는 케인즈의 사상보다 마르크스의 그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타당한 것이라는 결론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를테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며 또한 금일의 자본주의국가 모두가 마르크스가 생각한 것처럼 특정한 이익집단의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본주의체제의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실업을 창출하고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낳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辛昇哲教授*의 論評

—1980年代 危機 克服을 위한 새로운 이데올로기—

가장 理想的인 經濟狀態는 安定的이고 持續的인 成長이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需要와 供給이 擴大均衡을 이룩해야 한다. 그러나 現實的으로는 需要와 供給은 $S \geq D$ 라는 不均衡狀態가 통상적이다. 이러한 不均衡狀態가 擴大될 때 經濟는 不安定하게 되며, 不均衡狀態가 構造的으로 深化될 때 經濟는 危機狀態에 빠지게 된다.

케인즈가 分析의 대상으로 하였던 1930年代의 經濟危機는 $S > D$ 라는 構造的 不均衡狀態가 造成시킨 것이었다. 케인즈는 資本主義라는 經濟體制의 메카니즘이 最上의 것이기는 하나, 제대로 機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補完하기 위한 政府의 干涉을 主張하였다. 환언하면 케인즈는 政府를 社會的 利益의 옹호자로 보고, 供給側經濟(supply-side economy)로부터 需要側經濟(demand-side economy)로의 전환을 提議하는 이른바 經濟哲學의 變化를 가져오게 하였다.

1980年代의 經濟危機는 $S \geq D$ 라는 相反된 現象이 共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表現할 수 있다. 더우기 스태그플레이션은 緊縮政策과 緩和政策의 交替作用으로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失業 사이클을 相乘的으로 惡化시키는 스텝플레이션 사이클로 惡性化되고 있다. 이러한 스텝플레이션현상은 資本主義社會에만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社會主義나 開途國社會에도 만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現存하는 經濟體制 下에서의 經濟政策으로서는 그 解答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1980年代의 經濟危機는 1930年代의 메카니즘 그 自體의 결함이 아니라 메카니즘 그 自體가 機能하기 어려운 새로운 經濟與件이 造成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케인즈 經濟思想은 體制的 轉換期에 놓여 있는 經濟危機를 치유함에는 不適合하다.

農業社會에서 工業社會로 移行할 때에 社會發展의 原動力은 勞動의 機動性(labor mobility)이었으며, 오늘날 產業社會에서 用役社會로 移行함에 있어서는 資本의 機動性(capital mobility)이 重視된다. 經濟가 發展됨에 따라 資本이 集積되고 資本이 集積됨에 따라 過少消費와 過剩生産 현상이 유발되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解答을 준 것이 케인즈였고 케인즈政策에 의하여 資本은 過度한 集積(over-concentration) 현상을 招來하였다. 그 結果 資本의 機動性이 크게 低下됨으로써 1980年代의 經濟危機가 造成된 것이다.

* 漢陽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經濟發展의 原動力은 人間屬性에서 나오는 勤勞所得 즉 人的 富(human wealth)에서 나오는 1次 所得(primary income) 중에서 一部를 貯蓄하고 投資하여 생기는 非人的 富 즉 2次 所得에 대한 인센티브이다. 그런데 最近에는 1次 所得보다 2次 所得의 比重이 너무 肥大하여졌으며, 이로 인하여 所得의 隔差는 더욱 擴大되고 있다. 더우기 社會構成員들—消費者, 投機者 및 企業家—의 客觀보다 主觀을 앞세우는 利己的 性向이 高潮될수록 消費類型과 投資行態가 無節制하게 되어 公益과 私益의 괴리는 더욱 더 擴大되고 있다.

先進工業國家에 있어서 1980年代 危機에 대한 解決을 둘러싸고 두가지 思潮가 對立하고 있다. 그 하나는 危機의 根本原因이 케인지안의 인플레이션指向的인 巨視經濟政策에 따른 「큰 政府(big government)」에 있다고 보고 이를 다시 작은 政府로 復歸시켜 企業家精神(entrepreneurship)를 最大限으로 發揮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復古主義的 思潮이며, 다른 하나는 投資過程(investment process)의 私企業支配가 獨占價格化와 保護主義性向을 提高시켜 인플레이션과 失業을 造成케 함으로써 스태그플레이션의 源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코퍼레이트 파워(corporate power)를 民主的 社會統制(democratic social control) 下에 예속시켜야 한다는 進步的 改革思潮이다.

社會科學은 한 時代를 背景으로 하여 生成하고, 時代的 與件이 끊임 없이 變動됨에 따라 社會思想, 政治思想 또는 經濟思想도 끊임 없이 變動하게 된다. 마르크스는 1800年代 前半期를 케인즈는 1900年代 前半期를 時代的 背景으로 하여 그 思想을 形成시켰고 또 그 理論을 定立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의 思想이나 理論이 오늘날의 現實과는 相當한 거리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結論이다.

더우기 1980年代 危機의 責任은 發表者가 提示한 社會構成員의 個人行態(individual behavior), 經濟體制的 側面에서 코퍼레이트 파워, 그리고 國家(政府)政策 등 三次元的으로 歸屬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알빈 토플러가 말하는 第3波를 넘어서려는 體制轉換期라는 過渡期에 놓여 있고, 이러한 過渡期을 賢明하게 克服하기 위해서는 未來指向的인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個人的 價値觀, 企業의 投資觀, 政府의 政策觀, 그리고 對外關係에서의 國際觀 등 四次元的 側面에서 새롭게 定立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愼鏞廈教授*의 論評

1. 필자(김수행교수)가 케인즈의 불황(기본적으로는 실업)에 대한 경제학을 경제이론

* 서울大學校 社會學科 教授

내부의 문제로만 한정시키지 않고 전체 사회의 문제로 확대하여 ① 케인즈의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상 ② 경제체제에 대한 사상 ③ 국가에 대한 사상 등 사회사상까지도 고찰한 것은 시야를 크게 진전시킨 중요한 것이며 높이 평가되어야 할 점이라고 본다.

실제로 불황은 경제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 필자가 케인즈의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상을 논하면서 케인즈가 사회구성원을 ① 소비자 ② 투기자 ③ 기업가로 구분했다고 본 것은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가 케인즈는 불황의 원인을 「기업가의 비관적 장래예상」, 「자본의 한계효율의 하락」 등 기업가의 투자행위와 관련된 측면에서 찾는 것 같은 인상을 주도록 기술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약간 일면적인 것이 아닐까?

케인즈는 「한계소비성향의 하락」, 「유효수요의 부족」 등 소비·수요의 측면을 매우 중시해서 접근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적어도 그의 사회구성원의 범주화의 틀 안에서는 케인즈는 적어도 불황의 원인에 관한 한 소비와 투자, 소비자와 기업가의 양면을 매우 균형있게 고찰하고 있으며, 결코 기업가와 투자의 측면의 분석에만 기울어져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케인즈는 그의 사상의 전체에 있어서는 소비·수요의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케인즈의 사상과 접근방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오히려 그의 「構造」의 개념과 분석의 결여와 지나친 심리학주의 편향에 있다고 보고 싶다. 케인즈는 構造主義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케인즈는 불황을 주기적으로 낚는 경제구조와 사회구조를 심층 분석하지 않고 불황의 조짐 후의 소비자와 기업가의 피상적인 심리적 성향의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케인즈가 「자본주의 사회는 어느 사회체제보다 더욱 자유롭고 능률적인 사회」라고 보았다고 지적한 것은 정확한 관찰이라고 본다.

케인즈의 모든 학문적 노력은 國家라는 종래의 경제 외의 기구의 힘을 빌려서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취약점을 해결하여 자본주의를 공황이라는 조난으로부터 구제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의 배경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러시아의 공산주의 사회보다 자유롭고 능률적인 사회라는 그의 사회체제관이 뒷받침되어 있었다.

4. 케인즈의 국가관은 2원적으로 분열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현실의 (영국)국가와 정부에 실망하여 그것이 무능하고 비효율적이며 기존이익에 결부되어 있는

기관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그의 경제정책에서 등장하는 국가와 정부는 공정하고 능률적이며 중립적이고 고도의 공정한 전문지식인에 의하여 정책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능률적으로 관리되는 理想的 國民國家로 상정되고 있다. 이러한 이상적 국가가 그가 경제이론에서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다.

과연 이러한 국가는 현실사회에서 실제로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